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의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유아·학부모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많은,



청소년

학업성취결과가
공정하게 평가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7년 또는 9년 이상의
교육경력

9년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시행(20.1.1.)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2018 0개소 → 2019 1,320개소 → 2020 3,978개소
목표



유아학습권 보장

유치원 폐원 시에도 유아학습권이 보장됩니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신청시
심사기준 없음

교육감은 유치원 폐쇄 인가시
시기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등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고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행(19.8.6.) /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대규모 신규택지에는 국공립유치원을 100% 설립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확대

취원률 2018 25.5% → 2019 28.1% → 2020 40%
목표



학사비리 근절

대학 입시전형의 공정성 제고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평가위원은 회피 제척됩니다.

입학사정관 등 평가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대학의장에게
입학사정관 배제의무 부과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 회피의무 부과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19.10.17.)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등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대학 수

2019년
68개 대학



※ 지원 사업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평가지표 반영(19.3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대학입시 전형자료 부정 사용 시 입학이 취소됩니다.

전형자료 허위 기재시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처리

대학입시전형자료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시
입학취소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19.11.19.)

학교생활기록부
맞춤형 교원연수 현황

교원 2,240명
교육청 임무담당자 400명
강사 1,800명
관리자 600명
시행률 100% 완료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주요 향후 계획

2020년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마침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교육부	1
• 사립유치원에듀파인 전면 도입 • 고교교육기여 대학 지원사업 전면 개편	
국민권익위원회	2
•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무조정실	3
• 공공분야갑질 근절 실적 점검 • 갑질 근절 사회적 인식 개선 지속 홍보	
기획재정부	4
• 특별사법경찰 확대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	
국세청	5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규제방안 마련 • 심리기획·의견진술기획 확대를 통한 권리구제 강화	
보건복지부	6
• 사무장병원 근절 및 환수율 강화 관련 법령 개정 • 지자체 등과 행정조사·수사공조	
국토교통부	7
• 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합동 조감점검 확대	
법무부	8
•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단속 강화 • 치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행정안전부	9
• 지역협의회 구성 완료 • 제2차 안전감찰 국민제안 공모 실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청년 · 직장인

채용이 공정해지고,
갑질이 사라져 서로 존중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흡 →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9.9.28.)

민간분야 공정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 채용압력 및 청탁시 과태료
블라인드 채용 확산

※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9.7.17.)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적발 및 피해자 구제

적발 519건 | 피해자 구제 3,298명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갑질관행을 바로 잡았습니다.

공직자의 갑질금지
조항 없음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갑질금지 및 징계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시행(18.12월) / 공무원 징계령 개정 및 시행(19.4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 미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근로자 보호방안 시행

※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19.7.17.)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9.7월)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줄었다'는 응답 비율

공공기관 49% | 대기업 38% | 중소기업 35% | 개인사업자 34%



중 · 장년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곳곳이 투명해진,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

공사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이 방지됩니다.

시공자 선정 후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 절차 미흡 → 10% 이상 공사비 증액 시
또는 1/50 이상 조합원 요청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도시정비법 개정 및 시행(19.10.24.)

반복적인 수급비리 업체는 퇴출됩니다.

정비사업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지속적인 비리 발생 → 3회 이상
반복적인 수주비리 업체는
정비사업에서 영구 배제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19.7.30.)

서울지역 재건축 재개발 비리 적발
조합 운영 실태 관련 합동 점검 (국토부, 서울시, 김정원)

총 307건 적발
1차(2016) 124건 + 2차(2017) 76건 + 3차(2018) 107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시행



지역토착 비리 근절

지역실정 맞춤형 수사 | 지역 ○○노조 채용비리 등
| 브로커 등 지역토착세력 단속 | ○○군 관급공사 브로커 비리 등

지역의 고질적 · 구조적 비리를 분석,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토착비리 단속 현황

2018 573명 + 2019.1~9월 235명
구속 120명 구속 72명



중 · 장년

내가 낸 세금이 바르게
쓰이기에 기분 좋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국고보조금 등
일부 공공재정에 한해
환수 및 제재 부과 → 대가 없이 지급되는
모든 공공재정에 대해
금지 및 환수, 제재 부과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시행(20.1.1.)

관련 지침 개정 및 집중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

2018 387억원 → 2019 647억원
(1~7월)



탈세행위 근절 및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고액채납자 재산에 대한 금융조취 범위가 확대됩니다.

채납자 본인에 한해
금융조취 실시 → 금융조취 대상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 및 시행(20.1.1.)

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심판 단계별 진행정보 전부 공개(23개 항목, 홈페이지)

시행 이후 총 78,133개
2019.3월~10월 | 처리건수당
평균 9.8개
5,356건 처리 / 52,560건 공개

심판청구 → 사전배정 → 사전조사 → 사전명단 → 심판위원회 → 내부검토 → 발송



노년

든든한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대한민국



보험수급비리 근절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및 법령 개정

의료법 위반
조사 거부 등의 제재 미흡 → 장액·별급형 및 업무정지
15일 → 6개월

※ 의료법 개정 및 시행(19.11월)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19.8월 시행)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법치주의 환수체계 미흡 → 물수대상이 되는
중대법치로 규정

※ 법치주의의 근원적 규율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9.4.23.)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부당이득 환수 제재 미흡 → 1억 이상 정수금을 1년 넘게 미납 시
인적사항 등을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19.10.31)

사무장 연대책임 확대 및 특별징수팀 운영 등
부당이득 환수(징수율)

2017 4.7% → 2018 7.2%
227억원 290억원

건보 고액채납자
징수팀 운영
(19.1월)



안전분야 부패 근절

중앙부처와 시·도 안전감시 역량 결집
안전분야 감사·감찰 처분 건수(7만 건)

시·도 1,765건 | 2018 2,110건 | 2019.6월 기준 5,667건 | 공공기관 2,581건
중앙 345건 | 시·도 1,322건 | 중앙 1,764건 | 최초 참여